

1987년 이후 38년. 한국 민주노조운동은  
무엇을 성취했고, 어디서 멈춰 섰는가.  
재벌 중심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었으며,  
왜 벽에 부딪혔는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성찰하고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함께 풀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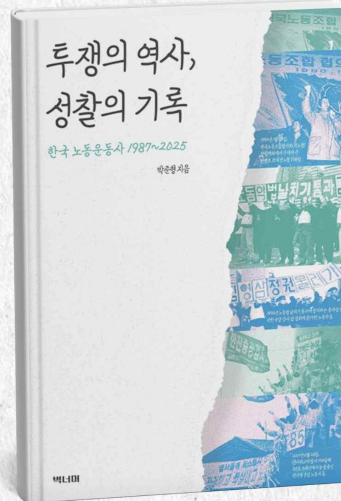
**발제**  
박준형 (저자)

**토론**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  
박근태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다시 한국 노동운동 1987~2025

## 시작하는 질문들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출판기념 토론회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19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종구 정동길3)

**주최**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문의 02-778-4001 / pssp4001@gmail.com



## [목차]

	사회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조직실장)
04	발제	박준형 (저자)
23	토론1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
33	토론2	박근태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42	토론3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46	종합토론	
47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1판 정오표	

## ‘항쟁과 승리의 서사’를 넘어 한국노동운동을 바라보기 위해.

박준형

-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에서 반영하고 강조하려했던 한국 노동운동의 해석과 평가를 정리해보고자 함. 다만 실제 원고의 서술 과정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책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쟁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므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
- 마침 올해는 민주노총 건설 30년으로, 『민주노총 30년사』도 발간되었음. 이 두 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을 것임

### 1. 역사 서술의 프레임 : 『투쟁의역사, 성찰의 기록』의 관점

#### o 두 접근법의 인식론적 차이

- 『민주노총 30년사』의 인식론: △당파적 진실: 운동의 입장에서 본 역사가 진실, △경험의 권위: 투쟁 경험 자체가 정당성의 근거, △내부자 시점: 운동 참여자의 관점이 특권적 지위
-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의 인식론: △비판적 거리: 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도, △결과의 검증: 데이터와 비교를 통한 검증, △비판적 내부자: 운동 내부에서의 자기 비판

#### o 피해자 서사를 넘어

- 이 책은 노동운동의 ‘피해자 서사’를 넘어서는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함. 즉, 정부와 자본이 책임이 있고 노동운동은 희생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노동현실, 노동문제에 노동운동에도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민주노조운동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참여자’(agency)로 인정하자는 것임. 문제의 원인을 주로 외부 억압·정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전략 실패 + 외부 조건을 결합해서 볼 필요가 있음.

\*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 간 격차 확대를 단지 막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격차를 심화하는 구조를 오히려 함께 만들어온 것은 아닌가?"(서문, 9쪽)

\* "노동조합의 공식 노동운동사 서술에 주로 등장하는 '승리의 역사, 진군의 역사'만이 아니라 실패와 패배, 오류의 역사까지 살펴보려 한다." (서문, 9쪽)

- 이러한 접근은 연구자들 사이에는 익숙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 안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렵고, 최근에는 연구자들조차도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비판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좌담회) “노동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경제, 사회에 있어서 민주노총도 하나의 참여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좌담회, 515쪽)

- 최근 발간된 『민주노총 30년사』의 관점과 비교할 수 있음(아래에 노동운동의 주류적 시각으로 인용하는 것은 주로 이 책의 내용임). 물론 민주노총의 공식 발간물이며 건설 30년을 자축하는 책이므로 성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이 책은 발간사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마저 부정당하던 암흑의 시대, 민주노총의 역사는 피와 땀으로 새겨온 투쟁의 기록”이라고 규정. 정권과 자본의 탄압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않았으며, 공장 울타리를 넘어 사회를 바꾸는 투쟁의 선두에 섰다고 서술하고 있음
- 그러나 『민주노총 30년사』의 <억압 → 저항 → (부분적) 승리>, 혹은 <시련 → 극복 → 성장>이라는 서사가 충분한지는 검토가 필요함. <구조(자본주의) + 행위(운동 전략) + 결과(격차 심화)→현재 결과>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 노조가 기존 투쟁 방식의 지속과 조직력 강화를 통한 돌파를 지향하는 것도 조직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기존 노선과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가 없이는 하던 대로 한다면 책에서 비판하고자 한 ‘경로의존성’(초기 선택이 이후 발전 경로를 제약)에 속박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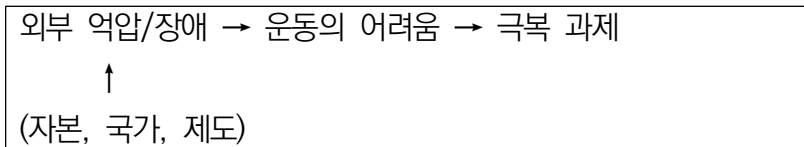
○ 인과관계 분석: '내재적 비판' vs '외재적 설명'

- ‘내재적 비판’ 방식, 즉 노동운동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기준으로 그 실현 여부를 평가하고, 실패의 원인을 운동 내부에서 찾을 필요성. 이분법은 아니겠지만 운동 내부를 평가해야 운동전략을 조정할 수 있음. 외부적 조건과 상대(정부와 자본)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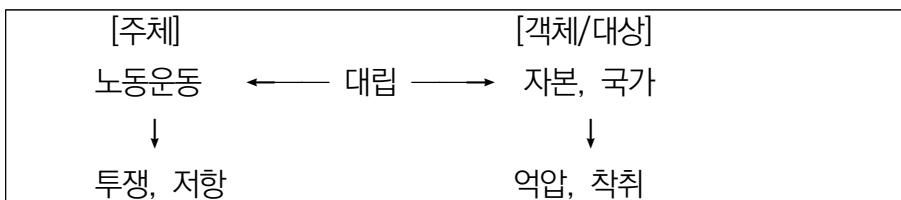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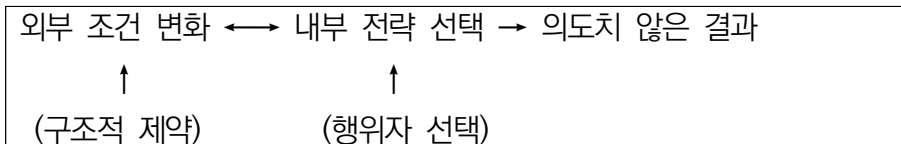
\* 예) 산별노조 실패 분석: “대기업에서는 노사 모두 산별교섭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과 세력 관계를 뛰어넘을 금속노조의 전략은 부족했다” (3장, 237쪽)

- 질문들: △산별교섭 부진은 대기업노조의 기업별 이해관계 집착, 전략 부재 때문인가 사용자단체 거부와 정부 지원 부재 때문인가, △임금격차 확대는 기업별 임금극대화 투쟁의 부작용인가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본의 분열 전략 때문인가, △정치세력화 좌절은 민주당 종속과 정치적 독립성 상실 때문인가 선거제도 불리함과 보수언론 공격 때문인가
- 노동운동 주류의 외재적 원인 중심의 비판, 노동운동은 외부 조건에 대응하는 주체로 위치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운동 외부에 있다는 입장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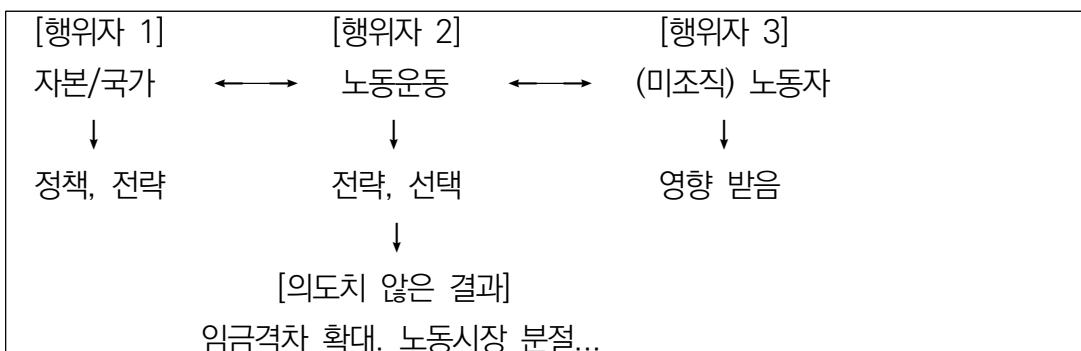




-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모두에서 찾되, 노동운동의 주체라면 특히 내부 요인에 더 주목 필요가 있을 것임



- 민주노총 혹은 민주노조 운동만이 한국 노동운동사, 혹은 '노동사'의 주체인가라는 문제도 있음.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공식조직들로 포괄되지 않는 노동자 대중은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 책 역시 잘 다루지 못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함. 이 책의 서술 대상은 '내재적 비판'으로 운동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비조직 노동자는 '운동'의 범주 바깥에 있음. 이 책의 핵심 문제의식인 '노동자 간 격차'는 조직 노동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은 사실(대기업 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의 다층 구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대체로 이 스펙트럼의 상층부에 위치하기 때문). 다만 이러한 고려를 통해 (책에서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는) '연대임금'을 '조직 노동 내부'의 격차 축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격차 축소로 확장할 필요성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임



o 경제(학)적 토대와 계급투쟁, 노동운동의 전개

- 경제(학)적 토대 분석 필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재벌체제, 금융세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이 노동운동 분석의 토대이기도 함

\* "노동자운동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당대의 자본주의 경제, 사회의 객관적 성격과 계급 관계(토대)의 구조 속에서 발전한다" (서문, 10쪽)

- 예를 들어 IMF 위기는 "금융세계화와 한국 재벌체제가 결합한 결과"로 인식하는 것,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임금격차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 등은 경제적 분석과 노동운동의 전개, 즉 계급투쟁의 동학을 연결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는 부분

- 물론 『민주노총 30년사』도 정권별로 구분된 챕터 별로 당시의 경제 상황도 당대의 '배경'으로서 정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 상황이 노동자들의 조건이나 투쟁, 조직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별로 분석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음

#### ○ 목적론적 서사의 문제

- 목적론(Teleology)이란 역사를 특정 목적이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기원 → 성장 → 시련 → 극복 → 발전 → 미래(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과거는 현재를 준비한 단계이며 현재는 과거의 성취 위에 선 도약점으로 인식됨. 이 틀에서는 미래는 운동의 목표가 실현될 지평으로 간주됨

-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빅뱅", "기원", IMF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와 같은 시련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실패를 일시적 좌절로, 산별노조, 정치세력화 등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목표의 예정)이자 언젠가 실현될 미래로 설정. 『민주노총 30년사』는 "30년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 "산별노조 운동의 지속적 추진", "비정규직 조직화의 단계적 발전" 등으로 서술

- 그러나 비목적론적 접근, 즉 역사를 예정된 방향이 아닌 우발성, 선택, 실패의 가능성이 열린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형성(1985~87) → 성공 공식의 확립 → 조건 변화 → 적응 실패 → 경로 고착 → 전환 필요>. 이렇게 본다면 1987년 투쟁 방식을 특정 조건의 산물로 상대화할 수 있으며, 다른 선택, 다른 결과도 가능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우발성 인정). 또한 정해진 목적 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로와의 단절(전환)의 가능성도 주장할 수 있음

- 과거는 현재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의 기원이며, 현재는 과거 선택의 누적된 결과(의도와 무관하게). 또 미래는 열려 있으나 전환 없이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 "양날개 전략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시도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애초 구상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6장, 459쪽)

-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필요. <투쟁했다 → 정당하다 → (결과와 무관하게) 의미 있다>라는 프레임은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

\* "치열하고 헌신적이며 때로는 영웅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이 애초의 목표를 의미 있게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문, 9쪽)

\* "우리는 지난 역사를 지나온 덕에 이미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주인공에 가깝다. 다만 영화에서와 달리, 우리는 미래를 아직 모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열려있다." (서문, 12쪽)

#### o 성과와 한계의 균형있는 인식 필요

- 물론 한국 노동운동에는 분명한 성과가 있으며 이를 인정함.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기여(군사독재 세력의 정치적 독점과 재벌의 경제적 독점 견제), 노동기본권 확대(전교조 합법화(1999), 민주노총 합법화(1999), 노조 정치활동 허용 등), 임금 상승(대기업 노동자 임금수준 OECD 평균 초과, 2022년 일본 추월), 사회복지 강화(고용보험 확대, 건강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조직 확대), 노조 조직률 상승(2021년 노조 조직률 14.2%로 최고치)

\*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발전은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과정과 결과에는 분명히 노동운동의 몫이 있다." (6장, 439쪽)

- 성과적 측면의 원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음

##### 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조건

- 3저 호황으로 정점에 이른 한국경제 성장
- 산업노동자 인구의 팽창
- 민주화운동과 급진화된 정치·사회운동과의 결합
- 억압적 노동통제에 대한 누적된 분노의 폭발

##### ② 고성장 시대의 구조적 이점

- 연평균 7%대 경제성장률
- 대기업-중소기업 간 일자리 이동 가능성 존재
- 기업별 전투적 투쟁이 전체 노동자 이익 상승으로 연결

##### ③ 전투적 투쟁의 효과

- 1996-97년 총파업: 날치기 노동법 저지
- 기업별 강력한 교섭력으로 임금 상승 실현

- 그러나 그 한계, 즉 노동시장 양극화(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2배 이상, OECD 최고 수준), 비정규직 문제(비정규직 비율 급증, 2000년 52%), 정규직 전환 기회 축소, 산별교섭 실패(형식적 조직전환, 실질적 산별 노사관계 형성 실패), 정치세력화 좌절(진보정당 분열, 민주당 종속), 원하청 격차(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적대적 관계 형성 등)



- 한계적 측면의 원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음

① 구조적 원인: 기업별 노조 체계의 고착

-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발달로 기업별 교섭체제와 친화력 형성
- 노사 모두 산별교섭 회피 경향
- 산별노조 전환 후에도 기업별 조직과 교섭이 중심 유지

\* "대기업은 핵심 인력만 정규직 직접고용(내부노동시장)으로 유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외주화, 하청 계열화(외부노동시장)하여 활용했다"(2장, 207쪽)

② 전략적 원인: 정세 변화 대응 실패

- IMF 위기 이전: 금융세계화와 재벌 과잉투자의 위험성 미인식
- 2008년 이후: 기존 노선 한계 인정 대신 관성적 대응 지속
- 경제위기의 '결과'(정리해고)에 대한 투쟁만 전개, '원인'에 대한 투쟁 조직 실패

③ 정치적 원인: 민주당 종속

- 2010년대 야권연대 일상화로 "범민주진보" 진영론 강화
- 포퓰리즘 정당(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이해 교환
-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자성 약화

④ 조직적 원인: 내부 조율 능력 부재

- 총연맹·산별노조가 대기업노조 임금협상 통제할 제도적 수단 부족
-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고임금 부문 조정 불가능
- 기업별 임금극대화 정책과 격차 축소 목표 간 충돌

○ 한편, 피하고자 했으나 몇 가지 서술상의 긴장도 존재함

- 구조와 행위의 균형: 노동운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구조적 제약(자본의 전략,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위험. 그러나 외부 조건은 운동 주체가 직접 바꿀 수 없지만, 내부 전략은 조정 가능함. 따라서 실천적 함의를 위해서 내부 요인 분석을 제기하고자 한 것
- 내재적 비판의 기준: 산별노조, 진보정당 등 운동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메타 수준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 대안의 실현 가능성: 연대임금, 산별교섭 실질화 등 대안이 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더 심층적인 구조적 진단의 필요성
- 회고적/사후적 평가의 한계와 대안과의 연관성

\*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2020)에는,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라는 대사가 있다. 영화의 주인공(Protagonist, '주도자')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 책에서 한국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의 어떤 실천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렇게 했으면 미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 시점에서 당시의 노동자운동과 그 주인공들이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

## 2. 서술에 강조하고자 한 주요한 쟁점들

### 1)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의 의미

- 책에서 전노협의 역사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유산으로 정리. 첫째, 투쟁 주체로서 조합원의 형성과 이와 연계된 학습·조직화의 전통. 둘째, 지역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로 대표되는 지역 기반 노동운동의 전통. 셋째, 노동운동 단체들을 노동조합의 틀 속으로 통합한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전노협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사회운동노조(Social Movement Unionism)의 원형적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

\* "사회운동노조는 노동조합이 정당에 종속되거나(정치적 노조주의), 혹은 일상적인 요구 투쟁인 경제 투쟁(경제적 노조주의)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운동, 즉 노동자계급 전체의 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적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동은... 노조를 단순한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정치·사회 운동과 결합된 계급적 조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전노협은 지역에 기반한 사업장을 넘은 조직화와 일상활동, 연대투쟁을 전개했으며, 정치·사회운동과 조직적, 운동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해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사회운동노조의 원형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1장, 98쪽)

- 특히 전노협-지노협이 조직한 공동임금투쟁은 '지역-업종-전국' 단위로 임투 시기를 집중하고 교섭을 일제히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는 기업별 교섭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노동자 연대의 실질적 토대를 만들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장을 넘은 일상적인 공동활동과 공동투쟁을 수행하며 노동자운동의 주체를 형성해온 운동 방식"으로,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투쟁이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계급적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

- 전노협은 1980년대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전통과 인적·조직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하였음

-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건설 주체 중 전노협만 조직을 해산하게 되었는데, '전노협 청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단지 이 때문만은 아님. 노선적 변화(노동해방, 평등사회 →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 삶의 질 개선'), 조직 구조의 변화(지노협 중심→산업별·업종별 조직 중심)

-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전환을 단순한 조직 발전이 아닌 질적 전환, 전노협의 세 가지 유산—투쟁 주체 형성, 지역 기반 연대, 정치적 노동자운동과의 결합—이 민주노총에서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투쟁으로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사회운동적으로 발전하고자 했던 지노협과 전노협의

지향이 사라져가는 것과 함께, 정부와 자본이 기업별노조에 경제적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노동계의 불만을 관리하는 방식이 강화되었다. (1장, 99쪽)

-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지도부의 '배신'이나 노선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었음. 민주노총 건설 당시에는 이미 전노협이 포괄하던 중소기업노조 사업장 노동조합의 비중이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었으며, 대기업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독자적 연대체를 건설하면서, "노동자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짐(노사정 대화 참여 문제는 아래 별도로 언급). 1995년 결성된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상을 거쳐 합법적 제2노총을 지향하면서 노동운동의 제도 내 위치를 정립하고자 했음.
- 결과적으로 기업별 노조 체제가 강화되고 노동자 간 격차가 커지면서 전노협 운동의 이념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적 연대의식도 은연중에 침식. 의식적 선택 이전에 객관적 조건의 변화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시점이 되면 노동운동에 다른 선택지는 이미 상당히 제약된 상태가 되었다는 점
- 그러나 전노협 운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회고가 아님. 노동운동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운동노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운동의 제도 내 포섭(코포라티즘)의 전개 속에서, 노조를 단순한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정치·사회운동과 결합된 계급적 조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전노협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현재적인 과제일 수 있음, 또한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무엇이 유실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 2) 기업별 전투적 경제투쟁의 양면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문제

- 이 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대해 민주노총의 일정한 책임을 지적함. 기업별 노조 체제의 고착화와 대기업·공공부문 노조 중심의 운동은 전체 노동자 이익 대변에 한계가 있었음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형성된 기업별 전투적 경제투쟁은 저임금과 억압적 노동통제에 맞서 폭발한 것으로, 1990년대까지는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성공 공식'이었음. 그러나 이 방식은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이익이 확장되는 방식이 아니게 되었음.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OECD 평균을 넘어 일본까지 추월한 반면,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는 2배 이상으로 벌어져 OECD 최고 수준. 이는 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며, 기업별 노조 체제가 만들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라 할 수 있음
- 자본주의가 고성장하던 시기(97년 이전까지)에는 대기업의 임금인상이 '낙수효과'로 이어지

거나 '일반적 임금 상승'이 가능했으나, 저성장 국면(IMF 구제금융 이후 점점 더 심화, 곧 제로 성장 예상)에서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게 됨

- 이러한 변화에 침묵하거나 자본 편향적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의 노동운동의 내재적 비판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임

\*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 간 격차 확대를 단지 막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격차를 심화하는 구조를 오히려 함께 만들어온 것은 아닌가"(서문, 9쪽)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듯,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수 정규직 노동자는 하청노동자 파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넘어 적대적인 태도마저 보였다"(5장, 412쪽)

- 노동운동의 주류적 시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본의 분할 전략의 결과로 인식함,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자본의 분할 전략에 맞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고 조직하여, 마침내 조합원 100만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지체되는 것은 자본의 집요한 탄압과 정부의 제도적 방임 탓이며,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조직을 확대해온 주체로 인식

\* "기업별, 고용형태별로 크게 벌어진 임금격차는 사회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서문, 9쪽)

\* "기업별 투쟁이 노동운동사에서 이론 눈부신 역사적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계속 이상화하고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과제로까지 승격할 경우, 초기업노조와 초기업적 교섭-투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임금격차의 축소, 연대임금의 실현을 위한 고임금 부문의 조정은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6장, 453쪽)

### 3)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평가

- 이 책은 산별노조 건설 과정을 노동운동 전략의 핵심적 실패 사례로 진단. 형식적인 산별전환이 크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산별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업별 노조주의가 대세로서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 산별노조-진보정당 양날개론 전략이 2010년대 이후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

- 노동운동의 주류적 시각은 산별교섭으로 나아가지 못한 산별노조 운동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평가는 보류. 최근 민주노총 등의 대응을 볼 때, 산별교섭의 실현은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개정의 최대치는 산별교섭을 '가능하게'하거나 지원, 촉진하는 수준일 수는 있으나 '강제'하는 것은 법리 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결국 노사관계 주체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2010년대 이후 산별교섭이 지체된 과정을 돌아볼 때 법개정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별노조 운동은 여러 측면의 의미와 한계가 함께 있지만, 주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의미를 평가하고자 함. 노동계급의 단결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구축해야 할 과제로, 분열(성별, 숙련, 산업, 민족 등)이 오히려 상시적 조건이며 연대는 자동적이 아니라 의식적 노력의 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

- 금속노조는 2003년 최초 산별 중앙협약 체결, 산별최저임금 도입, 주5일제 선도적 합의 등 의미있는 실천을 전개했으나, 이후에도 대기업 지부의 기업별 교섭 관행은 유지되고, 완성차 사용자의 산별교섭 참가 거부가 이어짐. 일부 업종, 부문에서 초기업 교섭이 발전했으며, 의미 있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는 했음(건설·화물 등 특수고용 노동자, 소규모 업종 조직들에서 초기업 교섭 실현). 기존 산별노조(주로 금속, 보진)에서도 산별노조 전략의 혁신은 꾸준히 추진되었고 지금도 치열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전체 노사관계의 변화 경향이 산별교섭 확산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직형태의 전환은 있었으나... 산별노조 대부분은 산별교섭 구조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실감한다" (6장, 435쪽)

- 그런데 좌절 원인은 무엇인가? 정권과 자본의 반대만이 원인인가 : 대기업은 내부노동시장 발달로 노사 모두 산별교섭 회피, 기업별 지부 인정이 기업별 교섭 관행 인정으로 귀결.

\* "대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내부 노동시장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외주·하청·특수고용을 활용하는 방식이 고착한다. 대기업, 공공부문과 그 외 부문의 임금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산별 노사관계 형성은 지체되었다." (6장, 435쪽)

\* "대기업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사업장 기득권에 대한 집착"(3장, 237쪽)

- 이후 산별노조라는 조직형태 속에서도 기업별 노조가 사실상 지속됨. 비정규직 조직화도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고, 불법파견 투쟁 등도 원청 정규직 전환이 목표가 되면서 기업별 성격이 다시 강화되면서 전개됨(이런 점에서 '직접 고용' 투쟁과는 다른 길을 간 현대모비스지회 등이 논쟁적이지만 예외적 사례)

#### 4)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 1980년대 말~90년대 초 정치적 노동자운동 형성(서노련, 인민노련 등). 그러나 이 운동들이 90년대 전반에 붕괴한 후 2000년대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은 다른 성격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성격보다는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의 의회 내 대응기구의 성격이 강하게 추진되었는데, 특히 96~97년 총파업 과정에서 의회 내 협상에서 기성 정당 의존의 한계 인식 → 정치세력화(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창당) 추진으로 나아갔기 때문임. 현장을 조직하는 정치운동이라기보다는 선거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출발점이 국회의원 의

석 확보였기 때문임(당시 유행한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어도.”라는 방식의 담론). 돌아 보면 이러한 출발점은 결국 민주당에 하위파트너가 되는 야권연대, 2022년 총선 이후 위성정당 참여로까지 이어짐

- 이 책은 진보정당 운동의 위기와 민주당에 대한 종속 문제를 강력히 비판. 최근의 상황으로 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과 입장을 공유하며 독자성을 상실한 점, 2020년 이후 위성정당 참여 논란, 2025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방침을 추진하다가 아무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일 등이 있음. 그러나 이는 2010년대 야권연대의 전면화는 2008년 분당 이후 지속적 분열, 반보수 야권연대 속에서 민주당에 종속의 결과임. 반보수 전선에서는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특히 이러한 구도의 형성에는 진보정당 이전에 민주노총에 책임이 있음(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에서 야당과 공조를 거쳐,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지지 결정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 이 책에서는 “진보정당의 위기는 그와 함께 성장해왔던 민주노총의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최근 유형근(「진보정당의 계급적 지지 기반 분석, 2003~2023」) 등도 분석하였는데, 민주노총에 대한 계급적 지지의 침식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약화로 이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노동운동 입장에서 진보정당의 위기를 평가할 때, 또 다시 조직노동(민주노총)을 근거지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장을 돌아 보면 ‘정의당은 정규직노동자들 편이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작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의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렇다” (“성공해서 실패한 진보 정당 20년사의 역설”, 《시사IN》, 2024년 4월 16일.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 인터뷰) (5장, 422쪽에서 재인용)

\*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서 떨어진 모습이 진보정당이라는 거울에 비치고 있는 셈이다.”(5장, 423쪽)

- 노동운동의 주류적 시각은 민주노동당 창당과 원내 진출(2004년 10석)의 성과 이후의 분열과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세력화 전략이 실현되지 못한 원인으로 “조직적 역량 부족과 진보정당의 대안 세력화 실패”, “민주노총 내부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된 점은 인정. 즉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시행착오’나 ‘외부 환경의 악화’로 진단. 민주노동당의 위기도 성공적인 창당과 이후의 시련, 외부 탄압과 난관을 중심으로 서술(구체적 원인 서술은 거의 부재)

- 그러나 열심히 하지 못해서라거나 정파에 따른 정당 분할도 큰 요인이지만, 민주노총의 책임, 특히 2010년대 진보정당의 주류와 함께 야권연대를 선도한 역사적 책임 역시 있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 2011~2022년 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정치 공학적 접근을 우선하면서 독자적인 계급 정치를 포기하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매몰되면서, 진보정당의 독자성은 사라지고 노동운동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 전략함



- 2000년대 민주노총 내에서 합의된 전략 노선인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진보정당)는 당시 위기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 두 노선이 모두 동시에 봉착한 한계는 2000년대 이후 민주노총 내 합의된 전략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양 날개론’ 전략이 사실상 붕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모든 전략은 항상 내외부적 조건에 따라 실현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면 운동 주체는 그 이후 전략을 보완하거나 전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민주노총은 과거의 전략을 선언적으로 반복할 뿐, 진지한 검토는 진행한 적이 없음

\* "양날개 전략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시도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애초 구상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6장, 459쪽)

\* "1998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 운동도 한 순환이 끝난 것이다"(6장, 438쪽)

## 5) 그 외 주요 쟁점들

###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

- 이 책은 문재인 정부를 노동운동 자체의 실패 사례로 분석함.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의제를 상당히 수용하고 추진했음(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등).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 정책은 중도반단되었는데,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해갈 수 있는 객관적 조건과 정치적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임

\*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조운동이 그간 제기한 여러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 요구는 왜곡되거나, 한계를 보이거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서문, 8쪽).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계가 있었지만, 노동운동이 요구해온 정책을 수용한 부분도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한계는 민주노총의 한계이기도 하다" (5장, 395쪽)

- 민주노총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경제정책에 대체로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임, (결국 실패한,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소득주도성장론 등 핵심 정책에 별다른 조직적 토론과 이론적 검토도 없이 동조.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민주노총의 실패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 노동운동의 주류적 시각은 문재인 정부 시기를 “개혁의 좌절과 후퇴”로 규정하면서도, (민주노총도 참여한) “촛불항쟁 계승 표방”한 정부, 이른바 “촛불혁명정부”임을 전제했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민주노총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있지만, 민주노총 자체의 실패라는 프레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점이 있음

- 이후 윤석열 정권 등장 후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를 복기하면서 정책을 쇄신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못함. 민주노총은 구체적 정책 요구보다 정권퇴진 투쟁에 집중.

- 오랜 관행 혹은 관성 : 정세 인식의 실패와 관성적 대응
  -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정세 분석 능력 부족
  - 1997년 IMF 위기 직전 재벌의 과잉투자와 금융세계화의 위험성 인식 실패,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정세에서도 기존 투쟁 방식 반복, 노선 전환 지체
  - \* “민주노총 역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고, 정작 위기가 닥치자 일관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좌충우돌했다”(6장, 433쪽)

-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평가
  - 먼저 이 책은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 문제를 부각. 특히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라는 민주노총에 대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대적 인식, 이는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서 떨어진 모습”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기 시작해야한다는 점

-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
  - 1996년 노개위 합의 실패와 총파업, 1998년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 수용의 경험은 민주노총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김. 이로 인해 조정과 타협의 복잡한 과정보다 사회적 대화 철수를 선택했고, 이후 20여 년간 이 구도 유지. 결국 "조정과 타협의 복잡한 과정보다 철수"를 선택하는 패턴 고착
  - 1998년 노사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의 혼란은 ‘정부와 자본의 약속 불이행’(민주노총 30년사)도 우선적인 원인임. 그러나 민주노총의 전략부재, (만약 전략이 존재했다면) 전략에 대한 내부합의 부재 역시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를 돌아보아야함

### 3. 역사적 계기 별 평가

- 접근 개요
  -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제도적 관성(제도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필요. 1987년에 형성된 운동 방식이 이후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착되어 오히려 문제가 되었음.
  - 그러나 이와 함께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 즉 경로가 형성되거나 변화하는 결정적 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한국 노동운동에는 특히 1987년 이후 세 번의 전환 계기(1998년, 2008년, 2020년대)가 있었음. 그러나 앞선 두 계기에서 전환에 실패.

2020년대 이후는 현재 진행형임

\* "19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현재... 기업별 전투적 경제투쟁으로 '끝까지 투쟁하면 승리한다'라는 공식은 점차 통하지 않게 되었다" (6장, 451쪽)

-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노선을 혁신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두 번 있었다고 평가함

①IMF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 진보정당, 비정규직 조직화 등 새로운 방향 제시 → 2000년대 중후반 한계 봉착

②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회운동노조로의 발전 필요 → 오히려 기존 노선 해체, 야권 연대로 이동

- 이제 2020년대에 세 번째 계기를 마주할 수 있을지가 문제, 다음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연대임금 실현: 노동자 간 격차 축소, 초기업적 임금체계 구축, △산별노조·총연맹 중심 체계 강화: 기업별 전투적 투쟁 지양, △정치적 독립성 확보: "범민주진보" 이데올로기와 민주당 종속에서 탈피, △새로운 운동 주체 형성: 1987년 세대 퇴장 후 새로운 세대의 운동 방식 모색 등

### (계기1) 1985년 구로동맹파업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1987년 대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빅뱅'으로서 이후 모든 노동운동의 원형 형성. 1987년은 위대한 투쟁이며 영광의 기원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낡은 체제'의 시작점. '신화'를 넘어 거리를 두고 양면성을 평가해야할 시점이 되었음. 이 폭발은 한국 노동운동에 '전투적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 체제'라는 강력한 경로의존성도 동시에 형성. 당시 고도성장기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호황 국면에서, 억압적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분노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전투적 실력 행사', 경제투쟁은 즉각적인 임금 인상과 현장 권력 장악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가져다주었음.

- 그러나 1987년 이후 형성된 운동 방식은 "기업의 지불 능력에 기초한 임금 인상 투쟁"에 집중되면서, 노동운동이 기업별 울타리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대기업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성과도 실현함. 그 결과 '기업별 전투적 투쟁 =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정서 형성. 이 성공의 경험의 이면에는 기업별 노조 체제 형성이라는 결과

- 물론 1987년 당시 기업별 전투적 투쟁은 당대 조건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음. 그러나 조건이 변화한 이후에도 이 방식이 지속된 것, 그리고 변화의 계기(1998년, 2008년)에서 전환하지 못한 것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로만은 설명되기 어려움.

\* 현실에서는 각주구검(刻舟求劍) 식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복

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제다. IMF 이전 법 제도로 돌리면 된다"고 답변했다(2021).

\* "19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현재... 기업별 전투적 경제투쟁으로 '끝까지 투쟁하면 승리한다'라는 공식은 점차 통하지 않게 되었다"(6장, 451쪽)

- 이 운동의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시도도 존재했는데,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지노협-전노협 운동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시도들과 그 의미를 책에 부각하고자 하였음. 특히 이 두가지 흐름의 출발점으로서 구로동맹파업(1985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구로동맹파업은 같은 해 대우자동차 파업이 상징하는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의 기업별 경제투쟁과 비교하여 지역노조운동, 기업을 넘어선 연대 투쟁이었고(즉, 지노협~전노협 운동으로 계승되는 흐름), 다른 한편으로 그 조직적 결과는 서노련이라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이었기 때문임.

- 정치적 노동자운동은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 제시하기 어려운 사회운동 혹은 사회변혁의 과제를 일종의 노동자운동의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 운동은 1990년대 초를 거치면서 한사노당의 실패와 소련 붕괴 등을 거치면서 와해하고 말았음(1998년 대선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의 진보정당 운동은 단절 이후 새로운 성격의 정치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책에서의 진단임).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붕괴는 노동자운동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의 경향이 전면화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노협 청산'의 조건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음

- 구로동맹파업과 지노협-전노협은 이를 통해 공단 내 초기업적인 '공투임투'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계급적 단결을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당시 조건에서 산별노조 건설에는 미달했지만 산별노조가 건설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하는지에 대한 원형을 제공. 이는 이후 금속노조의 일부 지역지부 운동에 계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노협 시절의 지역 연대와 변혁적 지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힘의 중심은 대기업 사업장으로 쏠렸으며, 이는 향후 산별노조 건설 운동이 형식화되고 노동시장이 분절을 막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음.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전노협 청산'(김창우 등)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임

\* "19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현재를 어떻게 결산해볼 수 있을까. 민주노조 운동은 헌신적 투쟁과 많은 희생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기본권의 점진적 확대라는 성과를 냈다"(6장, 438쪽)

## (계기 2) 민주노총 건설, 96-97년 총파업과 1998년 노사정 합의, 정리해고 저지 투쟁

- 노동운동의 주류적 시각은 96~97년 총파업과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대응을 서로 무관하게 보는 경우가 많음. 즉 IMF 구제금융 사태는 노동운동과 무관한 돌발적 사태(일종의

불가항력적 재난)이었다는 인식. 따라서 IMF 위기 이후의 대응은 그 이전과 연결되어 인식되지 않음

- 그러나 1996년부터 2001년(IMF 구제금융 졸업) 시기는 연속선 상에서 볼 필요가 있음. 한국 경제구조의 심대한 변화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도 마찬가지. 이 시기를 묶어서 인식할 경우, 민주노총 건설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전면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인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의 추진과 실패는 결국 김대중 정부의 IMF 구제금융 협약 체결과 정책개혁 수용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임.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였음.

- 한편 1995년 민주노총 건설은 노동운동 내부 역학구조의 변화(전노협의 약화,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쇠퇴, 한국노총의 임금가이드라인 야합,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 활성화)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이라는 조건이 맞물린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은 노사정 타협을 통해 실현하려고 시도되었는데, 이는 96~97년 총파업으로 파탄 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노개위 협상,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노총(조기)건설에 영향을 주었음(또한 '신자유주의'도 일종의 '자유주의'로서, 노동운동에 대해 탄압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추구. 이러한 정책을 민주화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추진하게 되고 김대중 정부도 계승하고 또 마찬가지로 실패로 연결되는 역사적·정치적 배경도 있음)

-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승리한 1997년에도 객관적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재. 물론 지배계급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상당 부분은 정치인들의 사후적 정당화였다는 점을 감해야함. 이미 97년초부터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해왔고, 97년 4월부터 기업부도가 이어지면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었음.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결과 IMF 구제금융은 맥락없는 돌발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일관된 대응기조 없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음.

\* "민주노총이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왜 나타났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한계나 책임은 없었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했다. 그래야만 위기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투쟁이 가능했을 것이다"(2장, 138쪽)

\* "경제학에 기초를 둔 현실 인식과 비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결과'(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넘어 '원인'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6장, 433쪽)

- 먼저, 96~97 총파업.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1996.12.26)에 맞선 민주노총 중심의 전국적 총파업은 지금도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의 전형으로 이해됨. '민주노총 30년사'는 "건국 후 최초의 전국 총파업 투쟁", "세계 노동계를 뒤흔든 정치 총파업" 등으로 표현하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역량을 입증한 투쟁으로 평가

- 책에서는 이 총파업의 성공 경험이 역설적으로 민주노총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했다고 분

석.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모든 문제를 '총파업'이라는 전술을 반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총파업 만능주의)을 보였음(그러나 1997년과 달리 이후의 파업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고립되는 양상을 보였음). 1996년의 승리가 만들어낸 '신화'가 이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IMF 위기)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제로 작동한 것은 아닌가

- 총파업 투쟁은 1997년 초 마무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의 '폐지'가 아닌 '유예'에 그치고, 재개정된 법안 역시 노개위 공익안에 가까운 것이었음. 더구나 이듬해 199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 등이 민주노총이 합의하는 가운데 개악법안은 모두 다시 도입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당시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 공세를 지연시킬 힘은 있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거나 대안적 체제를 수립할 역량은 부족했음을 의미

- 그 이후 IMF 구제금융 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잠정합의(1998.2.6).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탄력근로제 도입 합의(노동유연화 3제). 대가로 전교조 합법화, 노조 정치활동 허용, 고용보험 확대 등 합의. 그러나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반대 184, 찬성 54)되는 일련의 사태가 전개. 총파업으로 저지했던 노동법 개악을 불과 1년 만에 수용한 것이며, 현장의 해고 불안 속에서 '등가교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 민주노총은 이후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 선언, △총파업 실패와 참여 시도를 반복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탈퇴 결정

- 이 책에서는 1998년 노사정 합의와 이후 노동운동의 대응 과정이 단순히 지도부의 실책이나 정권의 배신 문제를 넘어, 기업별 노조 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 총연맹에게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과 같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을 보호하는 투쟁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고 전체 노동시장의 충격에 대해서는 정리된 입장이나 실천 부재. 그나마 90년대 꾸준히 운동이 이어져 온 건강보험 통합이 노사정 합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민주노총만의 성과라고 하기는 어려움(보건의료단체와 사회보험노조 등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성과)

- 이후 구조조정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은 정리해고 위협 앞에서 자신의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희생을 묵인하거나, 사내하청 도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 민주노총이 내세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라는 구호와 달리, 실제로는 조직된 정규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초래. 이 시기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의 폭력적 구조조정이 문제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한편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대신 '반대 투쟁'에만 매몰됨으로써 정



책적 개입력을 상실하고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확대에 대응하지 못함

### (계기 3)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농친 전환의 기회

- 이 시기가 결정적이었던 정세적 이유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한계와 자본주의 구조적 문제가 노출된 시점이었다는 점, △1998년 IMF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격차 확대 방지 대응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는 점, △기존 산별노조-진보정당 노선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이 시기는 ‘양 날개 전략’이 본격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시기. 따라서 전략적 전환이 노동운동 내에서 논의되어야 했으나 그런 논의보다는, △산별노조 조직전환에도 불구하고 2012~13년 경을 지나면서 금속 산별교섭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야권연대와 ‘반보수전선’을 통한 대정부 투쟁 집중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진보정당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 성격(야권연대)이 강해지고 민주노총도 이러한 변화를 지지함

*\* "한국 노동운동은 전략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지난 20여 년간,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놓쳤다" (6장, 439쪽)*

*\*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별 노사관계 확립을 비롯한 초기업적 교섭·투쟁, 사회적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이를 의회에서 뒷받침하는 정치세력화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길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 (6장, 439쪽)*

- 금융위기 전개 속에 경영위기를 맞은 쌍용차,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투쟁도 기업별로 전개 ("단지 해당 기업별노조의 전투적 투쟁을 지원하거나 연대를 확산하는 방식").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투쟁과 제조업 투쟁의 유리, 산업적·전체 노동시장 차원의 대안 요구나 실현 실패 등이 드러남

*\*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한 후인데도 산업적 차원 혹은 전체 노동시장 차원의 대안을 요구하거나 실현하지는 못했다." (6장, 435쪽)*

- 2008~12년의 '결정적인 시기'에 노동운동은 새로운 방향 설정 실패. 이 속에서 기존 노선(산별노조, 진보정당)의 해체는 계속 진행됨

### (계기4) 2020년대 이후

- 2020년대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부를 통한 정책개입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응보다는 정권 퇴진 투쟁 등의 정치적 대응을 우선함. 다시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상황에서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처럼 여러 정책요구 목록을 나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큼

-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구조적 변화를 위한 전략보다는 정책 요구의 나열, 민주노총의 정책 역량 부재와 정부 의존, 소득주도성장론 등 핵심 정책에 대한 독자적 검토 없이 동조가 문제였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부에 정책 요구 목록 제기 → 부분적 수용 → 핵심 구조(기업별 체제, 격차) 변화 없이 임기 종료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야권연대 관성 속에서 비판적 거리가 상실될 가능성이 많음
- 법·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노동운동 내부의 자기 혁신이 필요할 것임, 연대임금, 초기업 교섭 등은 정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 민주노조 운동이 현재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는 가운데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먼저 아래와 같은 내부혁신 과제들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과제는 2010년대에 실현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유효한 '사회운동노조'라는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대임금 실현: 기업별 임금극대화 → 노동자 간 격차 축소</li> <li>- 초기업 교섭 중심: 기업별 전투적 투쟁 → 산별노조·총연맹 중심</li> <li>- 새로운 주체 형성: 1987년 세대 관성 → 새로운 세대 노동자의 조건에 기반한 운동방식</li> <li>- 새로운 정치적 노동자운동 복원 : 민주당 연대/종속, 진보정당 위기 → 독자적 정치노선, 현장에 기반한 정치·사회운동</li> </ul> |
|---|

- 2020년대가 세 번째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열려 있는 질문. 1998년과 2008년의 계기가 '놓쳤던' 것이라면,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임. 1987년 이후 202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이라는 두 가지 행운을 얻었음. 그러나 2020년대 이후 한국은 저성장 혹은 제로성장,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 민주정의 위협이 전면화되면서 이전의 행운이 지속되기 바라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음. 국제정세의 변화(한국의 지속적 성장의 근거였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자동화-AI 등 산업 구조조정 등 변화 가속화. 그러나 노동운동의 주체적 노선 전환은 저절로 오지 않는데,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경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함. 이 책이 시도한 '성찰의 기록'은 그러한 문제제기인 셈.

\* "네덜란드의 화가 브뤼헬의 '장님의 우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마태복음(마15:14)의 말씀을 주제로 그린 것이죠. 민주노조 운동이 87년 이후 상당한 기간 [이렇게] 걸어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좌담 회, 517쪽)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 한국노동운동사 1987~2025**  
**토론문**

2025. 12. 18. 안정화

# I . 필자의 문제 의식과 노동운동의 과제

✓ 노동운동사 단행본 출간 축하드립니다. 박준형 선생님과 함께 하신 분들, 고생하셨고, 존경스러움.

✓ 필자가 제기한 많은 비판적 문제의식들에 공감. 특히 내부의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음. 이런 쉽지 않은 고민과 발언들이 노동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함.

✓ 필자의 글을 보며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임. 이하 의견들은 단행본과 발제문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재 노동운동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역량을 공유하면서, 노동운동의 발전을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임.

# I. 필자의 문제 의식과 노동운동의 과제

□ 사회운동노조 관련 필자의 주요 주장

✓ 필자는 85년 경제투쟁과 노조민주화 투쟁으로서의 대우자동차 파업, 지역연대 투쟁의 원형으로서의 구로동맹 파업,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노조운동의 결합으로서의 90년 전노협 건설 등에서 사회운동노조의 기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1997년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 시기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지 못했던 것은 결국 사회노조운동의 해체 또는 부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사회운동노조 주장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에 기반한 전투적 경제주의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결국 정치적 노동자운동과 사회적 노동자운동의 결합을 통한 노동운동이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 I. 필자의 문제 의식과 노동운동의 과제

□ 필자가 제기하는 노동운동의 과제와 대안 네 가지

- ① 연대임금 실현을 통한 노동자 간 격차 해소
- ② 기업별 투쟁 지양과 산별노조와 총연맹 중심의 체계 강화
- ③ ‘범민주진보’ 이데올로기를 넘어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 ④ 이러한 혁신을 위한 새로운 운동 주체 형성.

□ 이 책의 장점

- ✓ 내부의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 ✓ 정치적 노동운동, 사회적 노동운동, 경제적 노동운동의 결합으로서 노동운동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 즉,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시야에서 노동운동을 살펴보려고 했다는 점.
- ✓ 현재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 II. 논의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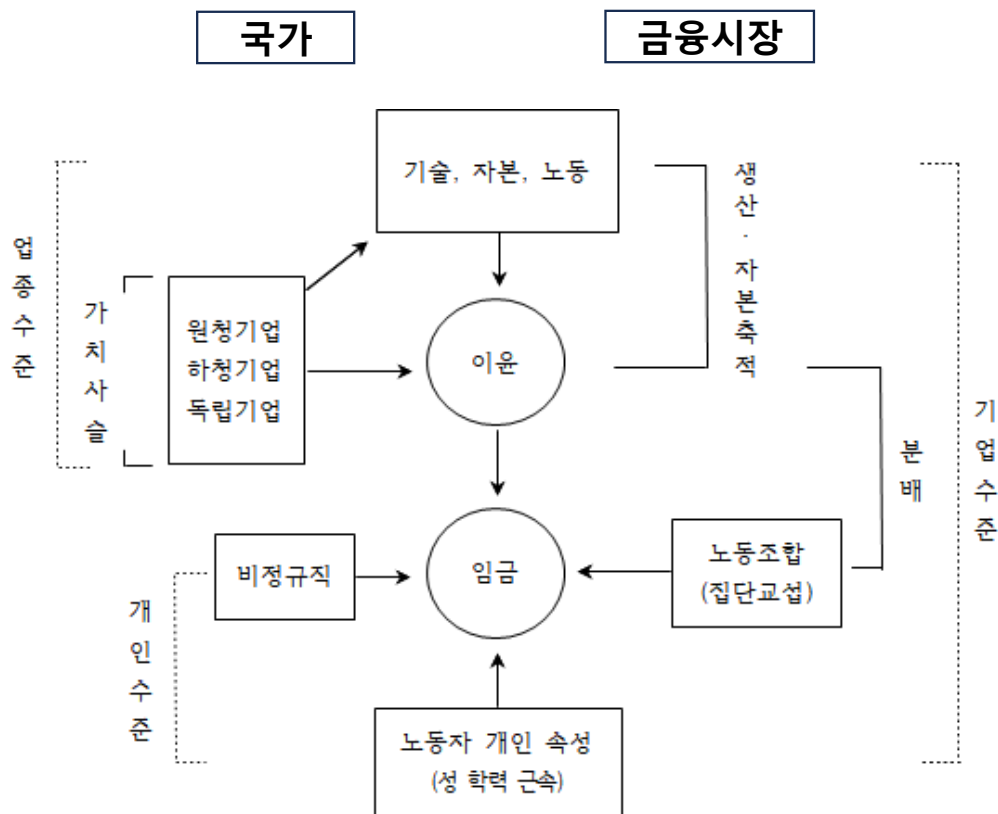
✓ 이 책은 노동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노동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그리고 주요 노동 문제로 노동시장 양극화(임금 격차)에 중점.

- 그러나 노동운동은 자신의 의제로서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상품시장, 금융시장 등 노동자들의 노동, 삶의 공간 전반의 의제와 과제, 조직(노조, 정당, 지역단체 등) 고민 필요.

- 이는 노동운동을 정리한 이 책의 한계는 아님. 다만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와 노동운동의 의제와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노동자들 사이의 분배의 문제만을 가지고 분배 문제를 풀기 어려움.

## II. 논의의 확장 : 자본, 노동, 가치의 분배와 노동운동의 노동의제

### 상품생산과 가치의 배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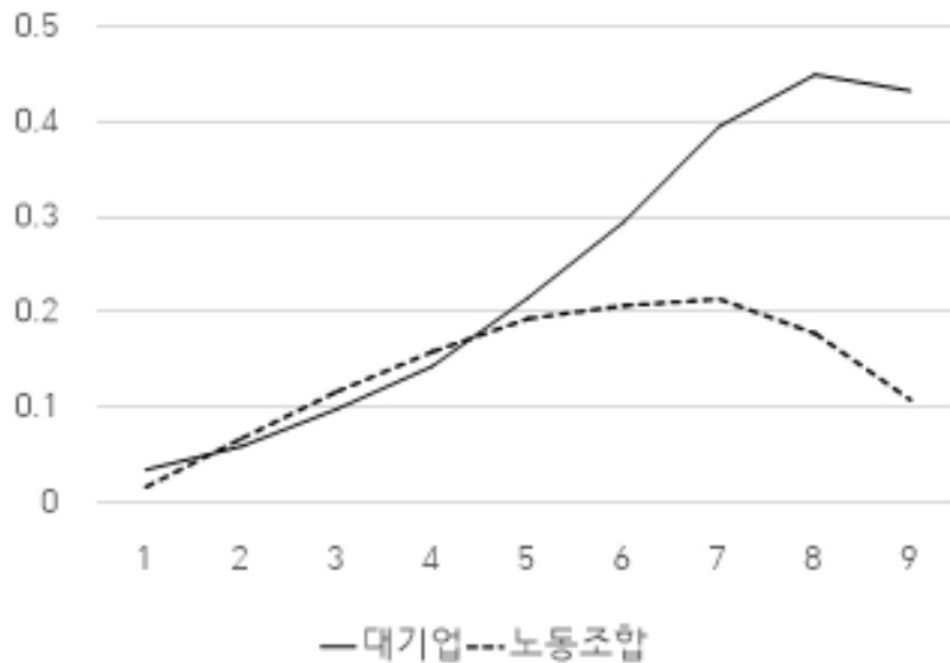


- ✓ 책은 하반부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사 정리
- ✓ 논의 과제와 대안 도출 확장 필요
- ✓ 생산, 분배, 가치사슬을 둘러싼 자본, 노동, 국가 조망 필요
- ✓ 노노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노자간, 자본간 격차의 궤적
- ✓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소비성향, 승수효과 외 노동은 없음. 미시적 기초로서의 효율임금과 노동조합.
- ✓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환율, 물가, 배당소득, 임금소득
- ✓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노동, 삶의 모든 부분에 의제 형성, 개입 필요.

자료: 안정화. 2021. 가치사슬에서 기술, 숙련의 위계적 구성과 이윤, 임금의 불균등 분배

## II. 논의의 확장 : 자본, 노동, 가치의 분배와 노동운동의 노동의제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임금소득 분위별 임금효과



✓ 노동자1인당 동일한 자본, 기술, 숙련을 전제하고도, 대기업 자본의 과점적 초과이윤이 임금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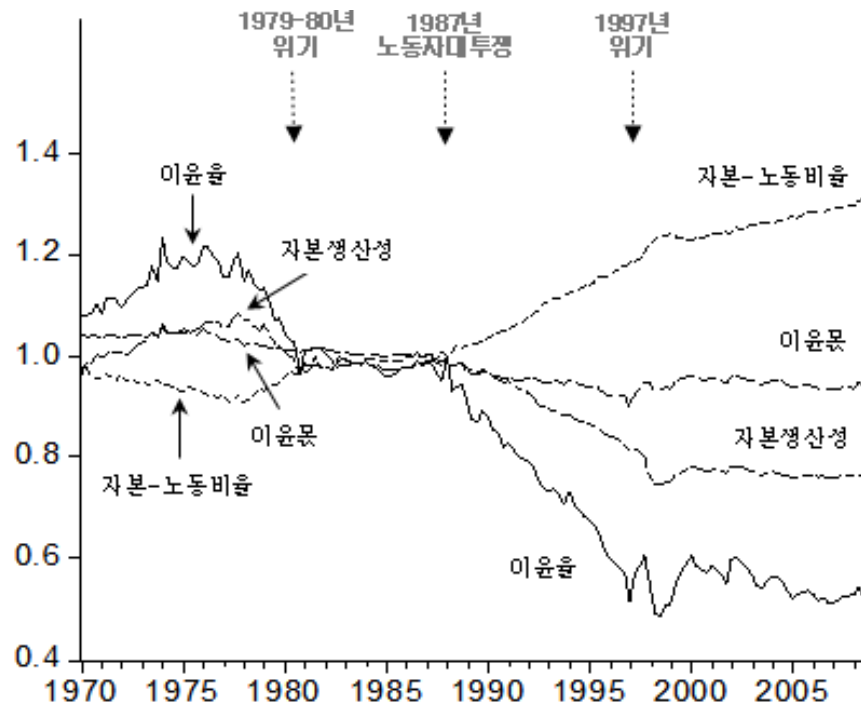
자료: 안정화, 2024. 노동조합은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2003-2022)

주: 1) 대기업(실선)과 노동조합(점선)의 분위별 표준화계수를 나타낸 것임.

2) 편의상 2018년 1개년도만을 비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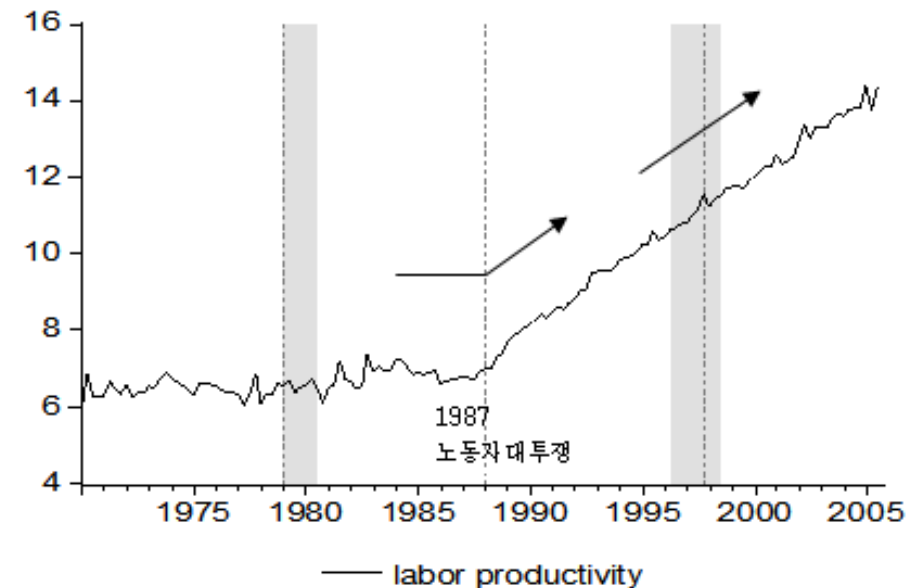
## II. 논의의 확장: 노동운동은 근원적 추세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가

근원적 추세들의 궤적 1987년 노동자대투쟁 변곡점



자료: 안정화. 2009.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구조변화(1970-2008)

시간당 실질노동생산성 추이



✓ 노동의 힘은 근원적 추세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

## II. 논의의 확장: 국가, 자본, 노동운동의 영향

- ✓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하청계열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발생.
- ✓ 당시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노조설립을 통해 성별, 학력별 임금 격차는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별 임금격차는 본격적으로 시작.
- ✓ 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에 본격 투자하고, 80년대 초중반 국가 주도의 제조업 하청계열화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국가, 자본의 전략이 주도적 영향이 끼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
- ✓ 87년 노동운동이 추세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대개의 경우 자본주의 하 노동운동은 역사적 국면 전환시 변화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노동운동이 생각하는 것보다 노동의 힘은 대개 왜소. 끊임없는 희망과 좌절의 연속이 일반적인 현상.
- ✓ 그럼에도 사회운동노조는 역사적 국면별 주요한 분기점 전후 한국 자본주의 궤적의 변곡점과 성격에 주목하여야 하며 의제 형성 필요. 노동운동의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중요.

## II. 논의의 확장: 임금체계와 산별교섭 문제

- ✓ 노동운동의 정책에서 임금체계, 산별교섭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 추가적으로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개념을 **직무와 노동의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확장하여 임금체계 문제를 검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업종수준에서의 가치사슬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와 함께 이를 위한 중층적인 교섭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 사업장을 넘어선 업종 수준에서의 **공간적 연대**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고려한 **시간적 연대** 역시 필요함.
- 이를 통해서 가치사슬에 대한 명시적 고려와 함께 임금 결정 기준에 직무와 노동의 시장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임금체계 논의 필요.

(자료: 안정화. 2019.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 직무와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연대임금)



## II. 논의의 확장: 전투적 경제주의 문제, 누가 전투적인가

- ✓ 대기업 노조들의 전투적 경제투쟁(대기업 노조 이익 극대화)이 불평등 완화와 연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필자의 인식에 동의.
- ✓ 다만 두 가지 고려 필요. 이제는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비유를 통한 이분법(투쟁, 교섭 선택)이 현실을 잘 묘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
- ✓ 개별 사업장 중심의 경제적 이익극대화를 위한 대기업 노조의 (전투적) ‘경제주의’와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전투적’ 경제주의의 문제.
  - 몇 십원, 몇 백원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 비정규, 하청노동자들 사례 다수.
  - 2010년대 이후 파업, 조직화, 초기업교섭 주요 사례는 여성, 비정규, 하청

## II. 논의의 확장: 전투적 경제주의 문제, 누가 전투적인가

- ✓ 배제된 노동자들이 제도적 배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 ✓ 파업은 조직화, 교섭과 함께 노사관계의 중요한 요소.
- ✓ 지난 10여 년 동안 대규모 집회에서 비정규직이 상당 부분임을 눈여겨 볼 필요.
- ✓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될 수 없는 간접고용, 하청, 플랫폼 특고 노동자 문제들.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정치적 노동운동과 중범위 수준(산업, 지역)과 거시(법제도) 수준의 해결 방안 필요.
- ✓ 끊임없는 갈등의 제도화 과정.

## II. 논의의 확장: 진보정당, 사회적 대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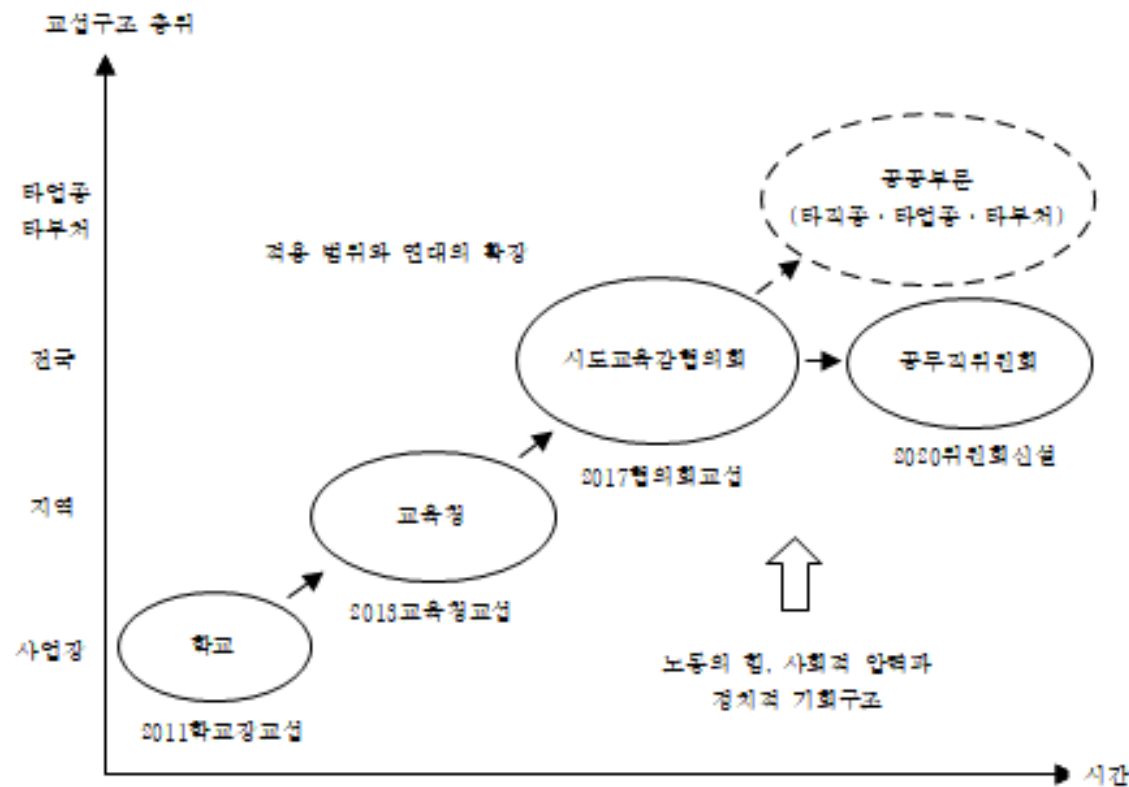
- ✓ 거시, 지역 의제들. 단위사업장, 산업을 넘어선 의제들. 사업장 단위를 넘어 공간과 시간을 확장시킨 의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정당과 함께 하는 정치적 노동운동 필요. 현재는 민주당에 임의 의존하는 각 노조, 연맹의 각자도생 법안 발의. 책에서는 대안이 다소 모호.
- ✓ 사회적 대화 참여 실패 경험의 트라우마, 민주적 의사 결정 매우 중요. 다만 사업장, 업종 및 지역, 중앙 수준에서의 참여는 의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일뿐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반대여서는 곤란.
- ✓ 중요한 것은 의제 형성. 노동운동은 의제 형성에 여전히 취약. 최근 더욱 각자 병렬적으로 제기 될 뿐, 중앙수준에서 조율되어 체계적으로 제시되거나 드러나지 않음.

### Ⅲ. 논의의 확장: 2010년대 이후 의미있는 변화들

- ✓ 교육공무직, 대학청소노동자들의 경우처럼, 분투 속에 2010년대 이후 초기업교섭 사례 남김.
- ✓ 예외적 사례일 수 있으나, 노동운동이 확률에 기대 운동을 할 수 없음.
- ✓ 노동 시장 분절, 1, 2차 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을 말할 때, 우리는 은연 중 1:1의 구도를 말함. 현실은 다수가 2차 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에 존재. 노동 의제는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함.

### Ⅲ. 희망들: 제도적 소외와 노동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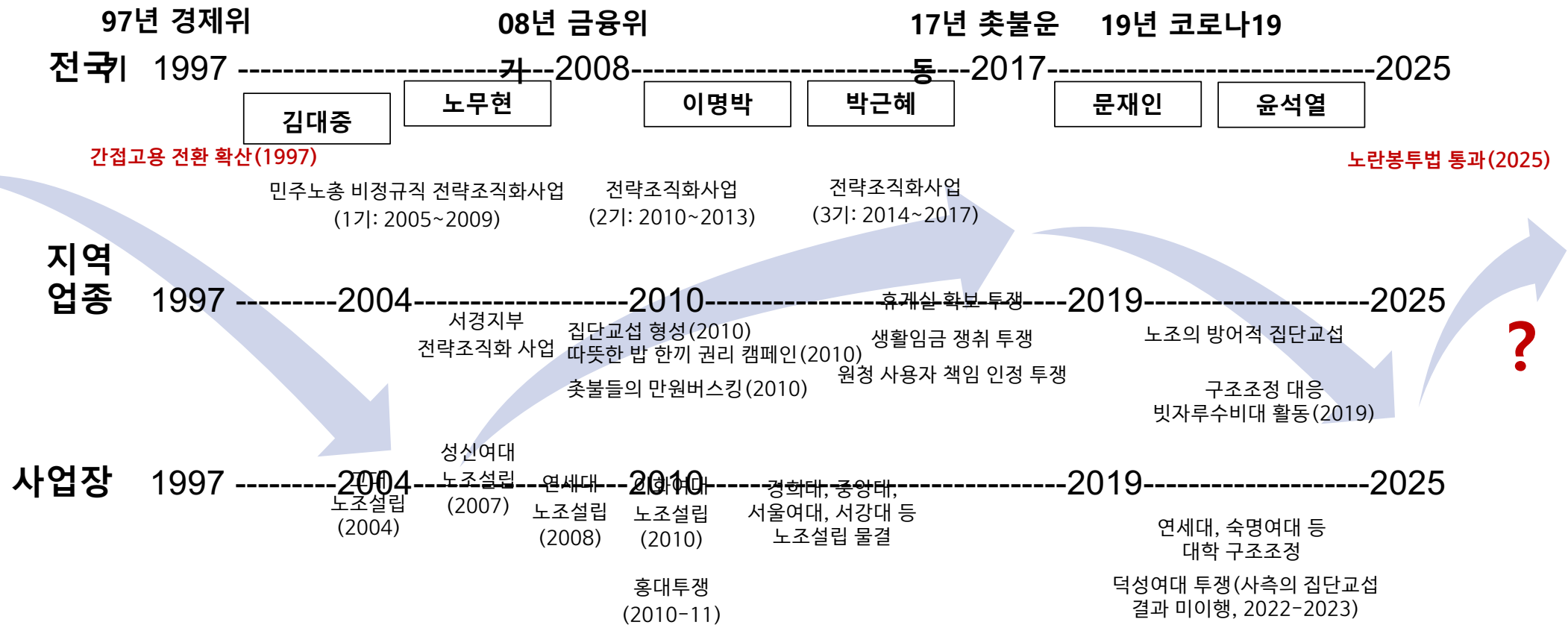
2008년 위기 이후 교육공무직의 중층적 초기업교섭 형성 사례



자료: 안정화, 2023. 제도적 소외와 노동의 힘: 학교 사례를 통해서 본 노동권 형성의 궤적과 동인.

# Ⅲ. 희망들: 파업, 조직화, 교섭의 상호작용과 초기업교섭 제도형성 궤적

## 2008년 위기 이후 대학 청소노동자 초기업교섭 형성 사례



자료: 안정화. 2025. 유령노동자와 유령사용자의 싸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조직화 교섭의 상호작용과 초기업교섭 제도형성의 동학

## Ⅳ. 논의의 확장: 노동운동과 주체

### 활동가, 연구자 재생산 문제

- ✓ 훌륭한 노조에는 훌륭한 활동가 존재. 투쟁가이자, 조직가, 교섭가. 재생산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
- ✓ 최저임금 미만의 연구노동에 생존을 걱정하며 이탈하는 연구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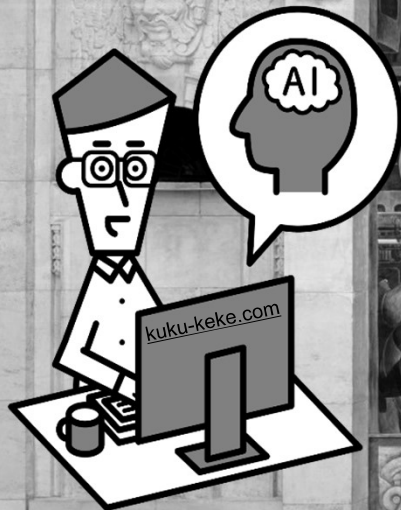
Rivera(1933) Detroit Industry, North Wall

# 전략 역량을 키워야 한다

-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토론편



Rivera(1933) Detroit Industry, South Wall



2025.12.18.(목)

박근태



## 감사와 동의

### ❖ 15만 금속노조에서의 경험

- 완성사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한미 FTA 저지 파업, 중앙교섭 성사 투쟁, 금융위기 대응,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 ...
- 왜 잘 안 될까? → 전략 재검토 필요
- 결국 학교로, 그러나 미완의 과제

### ❖ 지난 40여년에 걸친 노동(조합)운동사를 간결하게 잘 정리, 깊은 성찰. 감사.

- 훌륭한 책, 학습 교과서로 마땅

### ❖ 기본 관점: 동의

- 내부자 vs. 비판적 내부자
- 피해자 vs. 참여자
- 외재적 설명 중심 vs. 내재적 비판 중심
- 경제적 토대 분석 선행
- 목적론 vs. 진화론
- 성과 + 한계

### ❖ 서술상의 긴장: 동의. 대단히 어려운 문제

- 구조와 행위의 균형
- 내재적 비판의 기준: 목표/전략의 적절성 평가 필요
- 대안의 실현 가능성: 연대임금, 산별교섭 실질화 등 대안이 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더 심층적인 구조적 진단의 필요성. 완전 동의

백너머

현직 노동조합 활동가가 쓴,  
한국 노동운동 40년의 성찰!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한국 노동운동사 1987~2025  
박준형 지음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한국 노동운동사  
1987~2025

박준형 지음  
| 공공운수노조 부설  
교육센터 '움' 사무국장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및 주요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 쟁점들에 대한 의견

### ❖쟁점 1: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 대체?

- 전노협이 민주노총 건설의 유일/주도 세력?
- 전노협: 투쟁 주체로서 조합원의 형성과 이와 연계된 학습·조직화 + 지역 기반 노동운동 + 노동운동 단체들을 노동조합의 틀 속으로 통합 → 한국 사회운동 노조의 원형
- ‘전노협 청산’: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조직 해산, 노선 변화(노동해방, 평등사회 →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 삶의 질 개선’), 조직 구조의 변화(지노협 중심→산업별·업종별 조직 중심). 전노협이 노선 및 조직 변화 수용? 대체?
- 원인: 사회경제적 변화 + 정권의 탄압 + 힘의 열세 → 다른 가능성이 있었을까? 민주노총 건설에서 이탈, 독자노선 고수?

### ❖쟁점 2: 기업별 전투적 경제투쟁의 양면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 문제

- 전폭 동의. 그러나 어떻게 다른 경로/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

### ❖쟁점 3: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평가

- 1차 선택: 지노협 중심 전노협 → 산업별·업종별 조직 중심 민주노총. 지역 vs. 산업/업종.
- 2차 선택: 대기업 기업지부 인정. 산업/업종 vs. 기업.
- 산별노조 전환의 목표, 이유: 산업차원 단결? 고용 안정/방어막의 확대? 명분 vs. 실제
  - ✓ 완성사/대기업 조합원 설득 논리: 기업별 노조 한계 보완 → 1) 안정된 대기업 사업장 조합원: 산별노조 무관심/외면, 2) 위기 상황에서만 산별노조에 요구
  - ✓ 기업별 교섭의 확장으로서 ‘중앙’ 교섭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38)

## 쟁점들에 대한 의견

### ❖쟁점 4: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 2000년대 이후 진보정당 운동: 정치적 노동자운동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의 의회 내 대응기구.
  - ✓ 주류 노선의 당연한 선택 + 정치적 노동자운동의 취약
  - ✓ 민주노총에 대한 계급적 지지의 침식 →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약화. 그럼 왜 민주노총 조합원은 왜 지지하지 않나?
  - ✓ “조직적 역량 부족과 진보정당의 대안 세력화 실패”, “민주노총 내부 정치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
  - ✓ 2011~2022년 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정치 공학적 접근을 우선하면서 독자적인 계급 정치를 포기하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매몰되면서, 진보 정당의 독자성은 사라지고 노동운동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함.
  - ✓ 주류노선은 독자적인 계급 정치를 추구하는가?
  - ✓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운동의 종속. 민주당의 포용?

### ❖그 외 주요 쟁점들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 노동운동 자체의 실패 사례 → 과대한 자기 평가?
- 오랜 관행 혹은 관성 : 정세 인식의 실패와 관성적 대응 → 지적 역량 취약
-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평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서 멀어진 모습 → 비정규직 운동의 성찰도 필요
-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 “조정과 타협의 복잡한 과정보다 철수“ → 복잡성 회피, 핵심의 안정된 이해 추구
  - ✓ 노동’조합’운동이 사회적 ‘교섭’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 사회적 ‘교섭’의 성과/기대에 대한 회의 → 기업 교섭에 집착
  - ✓ ‘정부와 자본의 약속 불이행’(민주노총 30년사) + 민주노총의 전략 부재 → 상호작용

## ❖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

- 1. IMF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 진보정당, 비정규직 조직화 등 새로운 방향 제시 → 2000년대 중후반 한계 봉착
- 2.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회운동노조로의 발전 필요 → 오히려 기존 노선 해체, 야권연대로 이동
- 3. 2020년대: 왜 결정적 국면이 될 수 있는가? 앞의 두 번은 거시적 변화/위기가 만들어냄. 현재는 어떤 거시적 변화/위기? DX/AX? GX?

## ❖ (계기1) 1985년 구로동맹파업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 1987년 대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빅뱅'으로서 이후 모든 노동운동의 원형 형성. → 6월 항쟁의 여파: 사회 민주화 → 작업장/기업 민주화
  - ✓ '전투적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 체제' → 대폭적인 임금 인상과 현장 권력 장악.
  - ✓ 대기업 노동자들만 성과를 쟁취한 것이 아님. 임금에만 집중한 것도 아님. 본격적으로 문제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 → 변화의 계기(1998년)에 전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쁜 방향으로 전환한 것임.
- 구로동맹파업과 지노협-전노협: 공단 내 초기업적인 '공투임투'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계급적 단결을 지향하는 운동. → 지속됐으면 "기업의 지불 능력에 기초한 임금 인상 투쟁"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후 겪게 될 경제 위기와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 산별노조가 건설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형을 제공. → 산별노조 = 지역노조? 지역 중심 산별은 특수한 조건에서만 가능: 특정 지역의 산업, 산별 노동시장 = 지역 노동시장.
- 결과적으로 전노협 시절의 지역 연대와 변혁적 지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힘의 중심은 대기업 사업장으로 쏠렸으며, 이는 향후 산별노조 건설 운동이 형식화되고 노동시장이 분절을 막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거시 구조 변화의 반영, 주체가 이를 역전시키지 못했음. 대기업 노조의 힘은 대기업 힘의 반영임. 일종의 위치 권력.

## 역사적 계기별 평가

### ❖(계기 2) 민주노총 건설, 96-97년 총파업과 1998년 노사정 합의, 정리해고 저지 투쟁

- 96~97 총파업. '총파업'의 전형: “건국 후 최초의 전국 총파업 투쟁”, “세계 노동계를 뒤흔든 정치 총파업”(민주노총 30년사)
- 이 총파업의 성공 경험이 민주노총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모든 문제를 '총파업'이라는 전술로 해결하려는 경향(총파업 만능주의)  
→ 영웅적 투쟁, 그러나 성과 미흡. 과연 성공 사례일까?
- 민주노총,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라는 구호와 달리, 실제로는 조직된 정규직의 이익을 우선시 → 핵심 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 생리.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기제와 노력 필요
-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산업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대신 '반대 투쟁'에만 매몰됨으로써 정책적 개입력을 상실하고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확대에 대응하지 못함 → 타당한 평가이지만,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의 폭력적 구조조정 속에서 과연 가능했는지, 합의와 개입 이전에 내부를 설득할 수 있었을 지 고민됨.

### ❖(계기 3)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농친 전환의 기회

- 2012~13년경을 지나면서 금속 산별교섭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 완성사 참여를 강제하는 '중앙교섭 성사'는 애초에 불가능한 전략. 08년 이미 실패 확인됨. 이 때 전략 전환했어야.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않고 ...
-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별 노사관계 확립을 비롯한 초기업적 교섭·투쟁, 사회적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이를 의회에서 뒷받침하는 정치세력화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길 모두 한계에 부딪혔다."(6장, 439쪽) →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세웠어야.
-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한 후인데도 산업적 차원 혹은 전체 노동시장 차원의 대안을 요구하거나 실현하지는 못했다."(6장, 435쪽)  
→ 산업 수준의 고민/정책 자체가 결핍 - 산업에 대한 이해 수준 낮음. 기업 노사관계의 확장으로 사고.
- 2008~12년의 '결정적인 시기'에 노동운동은 새로운 방향 설정 실패.
- '중앙교섭 성사'에서 경제 위기 대응으로 전략 전환 시도. 그러나 내부 반발과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의 소용돌이, 지도부 교체 → 원점 회귀.
  - ✓ 함께 살자! 국민생존, 총고용 보장! - 경제위기 돌파와 노동자서민 살리기
  - ✓ [기자회견문]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2009.1.8)
  - ✓ 1.국민 기본생활 보장, 2.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3.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4.재벌기업, 투기자본 잉여금의 사회 환원, 5.제조업·중소기업 기반 강화

### ❖(계기4) 2020년대 이후

- 앞의 계기들과 달리 거시 구조의 변화 정도, 변화의 동인 작용: 정권 교체? → 정권의 주도성
- 내부혁신 과제들: 동의. 그러나 어떻게?
  - ✓ 연대임금 실현: 기업별 임금 극대화 → 노동자 간 격차 축소 → 사회적 임금 확대?
  - ✓ 초기업 교섭 중심: 기업별 전투적 투쟁 → 산별노조·총연맹 중심 → 전략적 의제 설정과 인내
    -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고, 교섭 가능한 의제. 핵심 이익 다툼보다 공동 이익 추구, 공공재 형성
    - 산업 전환 관련 의제들
  - ✓ 새로운 주체 형성: 1987년 세대 관성 → 새로운 세대 노동자의 조건에 기반한 새 세대 운동방식 → 어떻게?
  - ✓ 새로운 정치적 노동자운동 복원 : 민주당 연대/종속, 진보정당 위기 → 독자적 정치노선, 현장에 기반한 정치·사회운동 → 어떻게?



# 전략 역량을 키워야 한다

❖ 사회운동 정체성의 핵심: 저항 vs 대안 형성

❖ 사회운동노조: 저항 + 대안 형성

❖ 노동조합의 권력(union power)

- 노동조합의 역량과 제도 환경, 기회 구조,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의 역량으로 구성
- 노동조합의 역량은 노동조합이 가진 권력 자원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의 상호작용

❖ 전략 역량(Strategic Competency)

- 전략 능력: 전략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 ✓ 전략 과정: 프레이밍-전략 선택-전략 실행
- 전략 자원

❖ 출발점

- 지적 능력과 소통 능력의 고양
- 산업과 산업전환에 대한 이해

노동조합의 힘(Power)

역량 = f(자원, 능력)

자원  
(Resources)



활용 능력  
(Capabilities)

제도 환경

기회 구조

노동조합 역량

다른 행위자들의  
역량



노동조합

전략역량

전략  
자원

프레이밍

전략 선택

전략실행

전략  
과정

전략  
능력

# 올바른 금속산별

## 노동자의 희망입니다



## 노동조합 활동가 최복준 토론문

- ‘한국의 격차 문제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자원’이라는 관점을 보태고 싶음.
- 또한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노동운동의 ‘역사’ 자체를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함. 어떤 역사를 기념하는 일이 그것이 가지는 국가/사회/조직에서의 운영 원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역사적 과정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고 그 결과가 오늘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바로 그 ‘분별과 판단’을 운동사회에 성찰을 요청하려는 것이 저자와 저자와 함께 토론해 온 분들의 생각일 것.
- 민주노총 30년사에 대해 노동자운동의 투쟁을 “억압→저항→(부분적)승리” 혹은 “시련→극복→성장”이라는 익숙한 서사로 작성했다고 말하고, 다른 방식의 서술과 인식을 필요하다고 이 책은 서술하고 있음. 그래서 이 요구는 단지 서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기념사를 해치우는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음.
- 운동의 승리 경험을 최대치의 권위로 세우려는, 이른바 ‘주류적 인식론’, 이를테면 민주노총 30년을 자기 정당화의 연대기로 만들려는 습관과 구분되는 인식의 틀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꽤 용감한 시도일 것임. 이런 점은 민주노총 중심 운동의 관여자가 아닌 독자가 읽을 때, 오히려 그 시도가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음. 책의 서술에서는 운동이 노동시장 분단과 ‘격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구조를 함께 만들어 온 노동(자)운동이라는 평가의 관점이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임.
-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음. ‘격차’라는 의제 자체는 새롭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핵심 의제이고, 한국에서도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꾸준히 논쟁되어 왔음. 그래서 이번 책이 만약 단순히 격차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그것만으로 ‘도전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임. 책이 전하는 도전성의 핵심은 ‘격차가 심각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격차가 심화되는 변곡점의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노동자운동이 한국의 정치·사회에 행사해 온 영향력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면에서 묻는 데 있음.
- 오늘 그 질문을 더 분명하게 정리해보려 함. 책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서사의 경쟁이 아니라 어쩌면 평가 틀의 전환일 것임. 즉, 구조(자본주의·정치경제 구조) + 행위(운동전략과 선택) + 결과(격차 심화) → 오늘의 현실이라는 틀로 노동운동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데 있을 것임. 이미 양대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주류’의 위치에 있기 때문임. 전·현직 국회의원 배출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 등등. 이 정도의 위치를 인정한다면 노동조합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일정 부분 ‘책임’의 자리에도 서 있음을 인정해야 함. 물론 한편으로 노동조합(양대노총) 내에는 권력과 그렇게 가깝지 않거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산하 조직과 조합원들도 많음. 그러나 명분적 위치를 점하고는 있을 수 있으나 다수적 위치가 아닌 것은 분명함. 그러

나 어려운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해서 그것이 곧 바른 결정으로 등치 되는 것도 아님.

-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원치 않았던 공격’이나 ‘보수언론 탓’으로 돌리는 방어적 태도에 가둘수록, ‘격차’ 문제 해결이라는 지점에서 사회적 발언권과 권능을 보이지 못할수록, 이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노동조합(성원)의 제도 정치 내의 쟁탈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하게 작동되어 왔음. 이것이 이른바 ‘야권연대’라는 민주당과 그 주변이 강화해온 핵심적인 통치 기법일 것임. 그래서 노동자운동의 이런 흐름의 결과로 실제 득표력이 열여 질수록, 사회적 의사결정의 무대에서 오히려 더 밀려나지 않도록, 노동조합 내부는 정치적행위에 더욱 매몰되고 강조되는 흐름이었음. ‘당 중심’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의 지점도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며, 토론자로 나서며 스스로 먼저 아프게 바로 보고 있음.
- 책이 말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구조를 바로 보지 못한 노동조합이, 결과적으로 조직된 조합원의 자기 이해를 방어하는 데 머물렀고, 그 과정에서 전환과 내부 혁신을 놓쳤다는 점임. 조합원 방어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일 것이나, 문제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격차 구조를 바꾸는 전략과 결합되지 못했고, 오히려 노동시장의 분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굳어졌다는 걸 지적하고 있음. 말하자면 조합원 방어가 ‘사회적 연대’로 확장되지 못하고 ‘조직된 자들의 이해의 방어’로만 굳어질 때, 노동운동은 의도와 달리 격차 심화의 한 축으로 기능했다는 지적임.
- 이 지점은 흔히 말하는 ‘진보정당’과 ‘산별노조’라는 양날개론의 실패와도 연결된다는 점에도 동의함. 겉으로는 날개가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보다 서로의 한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결합해 온 것임. 일부 진보정당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공식적 결정과 정책 판단이 민주노총의 자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단지 ‘노조가 강해서’만이 아님. 선거에서의 득표뿐 아니라, 연계된 각종 자원—조직, 인력, 네트워크, 동원 역량—이 암묵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형성해 왔기 때문임. 그래서 진보정당은 독자성을 말하면서도 ‘공유한 자원’의 토대를 공유한다 딜레마 속에서, 비판과 배신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제한해 왔음. 또한 이 공유한 자원의 핵심요소는 대중의 동원력으로 단지 진보정당만이 공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다른 모든 정치세력이 공유한 자원이기도 함. (이른바 보수언론이 이 자원을 가격하여 얻는 정치적 이익도 있어 사실상 공유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함) 그리고 그 결과, 노동자운동은 정작 사회 다수의 변화하는 세계—세대, 수도권/지역, 산업 재편, 산업 내 구조 변화, 일자리 속성의 급격한 변동—를 정면으로 조직하고 대표하는 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것임.
- 사회적 대화 논쟁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과거 노사정위의 트라우마’가 논쟁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지만, 더 깊이 보면 논쟁은 ‘노동조합이 민주당 정권의 하위 파트너인가/아닌가’라는 정치적 위치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함. 여기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는 쉽게 ‘거래’의 언어로 변할 수 밖에 없음. 대화 참여를 주장하는 쪽은 ‘얻을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반대하는 쪽은 ‘쟁취를 명분으로 내세우

지만, 둘 다 어느 순간 ‘교환’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함. 물론 이를 두고 ‘사회적 계약’이라는 우아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물/현찰/지위/자리 등이 공개되어 거래되는 ‘교환’의 프레임일 것임.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책에서 말하는 ‘총노동’의 관점으로 사회 전체의 격차 구조를 바꾸는 장이 아니라,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내줄지를 따지는 장으로 논의가 축소되어 온 것으로 이해함. 결과적으로 대중은 이 장면을 보고 ‘결국 자기들 몫 챙기는 이야기라고 판단한다는 뜻이고, 노동조합이 대중적 신뢰를 잃는 방식은 대개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다시 좁아진 자원에 기댄 진보정당의 왜소함, 노골적 야권연대(의석배분), 선거동원, 이에 대한 보수과의 같은 동원자원 만들기의 반복.

-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질문은 노동조합이든 진보정당이든,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 이들이 기대어 온 ‘자원’의 토대는 지금 어떤 모양인가? 다시 말해 대중의 세계는 지금 어떤 모양인가? 대중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님.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산업이 다르고, 산업 내부의 하청·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영세자영업의 층위가 다름. 돌봄과 이주, 성별·가구 형태, 생애 주기의 변동까지 겹치고, 여기에 세계적 갈등과 전환(기술·공급망·안보·기후)이 노동시장과 생활비를 흔들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이 여전히 ‘조직된 조합원의 이해를 표준으로 삼아 이 변화하는 세계를 해석한다면, 노동조합은 점점 더 ‘부분’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것이며, 대개 ‘낙수효과’의 정치로 격차사회를 강화해온 정치를 돌파할 힘을 잃는 것임.
- 그래서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놓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강하게 동의함. 노동조합이 주류의 위치에 있다면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하는 함. 그 책임이란 자책이나 비난이 아니라 사회적 설득의 언어를 다시 세우는 것이어야 할 것임. 그로부터 조합원 방어를 ‘연대의 확장’으로 재설계해야 함. 조직된 이해를 지키는 토대가 비조직 노동·지역·청년·플랫폼 노동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정책과 교섭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할 것임. 격차의 구조를 겨냥하지 않는 방어는 결국 더 큰 불신을 부를 것이라는 일부 집단의 우려와 문제제기 만으로는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일임. 그래서 이 부분을 운동화 시키는 일에 오늘의 자리에 모인 분들이 같이 생각을 모아 주시면 좋겠음.
- 그래서 진보정당-산별노조의 관계를 ‘자원의 공유’가 아니라 ‘대중의 세계를 조직하는 프로젝트’로 재구성도 해야 할 것임. 선거연대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를 바꾸는 장기전략과 역할 분담이 필요함. 여기서 회피하면,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의 중첩과 대대가 아수라장이 되는 반복만 남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파조직이 선거조직으로 변모한데 그치지 않고 민주노총 그자체가 거대한 ‘선거조직’으로 바뀔 것이 분명함.
-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거래’가 아니라 ‘구조개혁’의 언어로 다시 정의되어야 함. 무엇을 얻을지, 무엇을 쟁취할지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격차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 그 목표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사회적 합의의 형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민주노총이 차라리 경사노위 해체 후 새롭게 건설하는 투쟁을 벌이면 어떨까? 거대한 사회논쟁을 과감하게 벌여가면 어떨까? 그러면 최소한

쫄보라거나 스스로 쪽팔리다라는 말은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 오늘날 한국의 격차 문제는 노동조합 바깥에서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책이 던지는 가장 큰 시사점일 것임. 과거에 비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 판단은 더 많은 결과를 낳고 있음.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싸워왔는가’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고, 선택할 것이고,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다시금 정면에서 말해야 할 시기임. 그 말이 시작될 때, 노동조합은 조직된 조합원의 이해를 넘어 사회 다수의 신뢰를 다시 얻고, 격차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연대의 중심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임.
- 끝으로 책을 출간한 출판사명이 ‘벽너머’라는 점도 함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음. 출판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본 적은 없으나 아마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던 길에 놓인 ‘벽’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임. 바로 이 ‘벽’의 크기와 단단함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자는 데서 고생이 정말 많으시다는 연대와 위로의 말을 함께 전함.

## [종합토론]



## 『투쟁의 역사, 성찰의 기록』 1판 정오표

쪽	수정 전 문구	수정 후 문구
7	군사독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군사독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52	대응 대체를 정비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하고
84	조직적 우세했다고	조직적으로 우세했다고
84	민주노총이 출범하기까지의 1년간	민주노총이 출범하기까지의 1년간
	1994년 한국통신 노조 파업 ... 1994년	1995년 한국통신 노조 파업 ... 1995년
87	5월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5월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98	정치사회운동가	정치사회운동과
136	김대정 정부와의	김대중 정부와의
140	노동투입 점진적 둔화가	노동투입의 점진적 둔화가
208	원상 회복	원상 회복
256	직선가를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직선제를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390	민주노총 집행부와	민주노총 집행부와
	2017년 10월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의 사 내하청 노동자들이 오랜 준비 끝에 금속 노조 현대모비스 아산지회를 설립하는 데 성공한다. 이어서 화성 이화모듈 공 장을 비롯한 현대모비스의 여러 사업장 에서 잇달아 지역지부 산하에 비정규직 지회가 결성된다.	2017년 5월 현대모비스 화성공장의 사 내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화성지회를 설립하는 데 성공한다. 현대 모비스 비정규직 공장 최초의 민주노조 였다. 이어서 2017년 10월 아산공장을 비롯한 현대모비스의 여러 사업장에서 잇달아 지역지부 산하 비정규직지회가 결성된다.
386		

